“사용 안한 살충제 성분 왜 검출?”…전수검사 부실 논란

살충제 계란 파문

“비펜트린 성분 든 살충제 쓰지도 않았는데…이해 안돼”
부적합 판정 전남 농장 3곳 이의 제기…3차 검사 의뢰
일부 성분조사 누락·난각코드 잘못 표기에 소비자 불신

전남지역 일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잔류물질 전수검사’를 진행한 정부와 전남도 검사시스템의 신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부 농장에서 ‘쓰지도 않은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고 거세게 항의하는 등 검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일부 농장에서는 난각코드(달걀 식별번호)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믿고 먹어야 하느냐”며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지역에서 살충제 성분이 초과검출된 산란계 농장은 모두 7곳이다.

이중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장 3곳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검사를 전담했고, 일반 농장 4곳은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조사했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화순양계단지 소재 일반 농장 3곳은 전남도의 검사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하며 3차 검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그동안 ‘아미트라즈’ 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상품명 ‘마이탁’)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적은 있으나, ‘비펜트린’ 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상품명 ‘와구 프리 블루’)는 쓰지 않았다”며 “비펜트린 성분이 시료에서 검출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림부에서는 ‘비펜트린’ 성분의 살충제는 일반농장에 한해 검출기준 0.01ppm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아미트라즈’의 경우 검출돼서는 안되는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농림부는 시범사업으로 ‘닭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전국 산란계 농장에 닭 진드기 살충제를 지원했으며 화순군도 지난 4월 한통(5㎏) 25만원짜리인 ‘와구 프리 블루’를 3개 농장에 각 4통씩 보급했으나, 이들 농장 3곳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보관 중이다.

농장주들은 “해당 제품은 3년 전 써봤던 ‘와구 프리’ 제품이 지난해 이름만 바꿔 새로 출시한 제품으로, 효과가 미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검사에서 아미트라즈 성분이 나왔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비펜트린 성분의 검출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일 오전 방문한 A농장에서는 ‘와구 프리 블루’ 4통이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창고 한 편에 보관돼 있었고 500㎖ 용기에 담긴 마이탁은 절반 정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농장 대표 박모(55)씨는 “3년 전부터 아미트라즈 계열의 ‘마이탁’만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엔 지난달 중순께 마지막으로 닭장에 뿌렸다”면서 “그런데 이번 검사에서 갑자기 ‘와구 프리 블루’ 성분이 나왔다고 하니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A농가에서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고, 아미트라즈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은 확실하다”며 “‘와구 프리 블루’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농가에서 왜 비펜트린이 검출됐는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농가들이 검사 시스템에 문제를 삼고 있는데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일부 살충제 성분조사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곳 중 시·도가 자체 조사한 420곳은 표준시약이 없어 2~7종의 살충제 성분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농림부는 지난 19일부터 경북 등을 제외한 전국 시·도 420개 농장에 대한 살충제 성분 보완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계란 출처를 알려주는 ‘난각코드’ 제도마저 허술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마무리된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 난각코드를 아예 찍지 않은 농장은 물론 생산지역을 나타내는 고유숫자를 다른 지역으로 잘못 찍은 농장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취객 자동차도로에 하차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객을 내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승객이 욕설하자 하차시킨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밤 10시 37분께 승객이 술에 취해 욕설한다며 자동차전용도로인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에 하차시켰으며, 술에 취해 출구를 찾던 승객은 같은 날 밤 11시5분께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매출 급감에 산란계 농장·제빵업계 아우성

판매 재개에도 불안감 여전

계란 환불 요구도 늘어

유통업계가 지난 16일 판매 중단 조치 하루 만에 계란 판매를 재개했으나 ‘살충제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여전히 계속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광주·전남 지역 산란계 농장, 제빵 업계에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마트 147개 전 점포에서 계란을 구매한 고객 수는 지난주보다 44%, 지난해 동기보다는 43% 줄어들었다. 매출도 지난주에 비해 40%가 떨어졌고, 지난해보다는 28% 하락했다. 점포당 계란 환불 건수도 25건에 달했다.

지난 17일에도 이마트 전체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인 ‘이마트몰’ 매출은 전주보다 46% 줄었다.

이마트는 점포 계란 판매대 옆에 ‘현재 당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계란은 정부 주관 아래 실시된 살충제 검사를 통과한 상품이다’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세워놓았지만 소비자들은 외면했다.

롯데마트도 16일 계란 판매를 재개한 오후 7시 이후 계란 매출액은 평소보다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받은 적합 판정서를 프린트해 계란 판매대 주변에 부착했지만, 직원에게 정말 안전한지 재차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같은 날 판매 재개에 들어간 농협하나로마트도 최대 매장인 양재점의 16~18일 계란 매출이 평소보다 무려 40%나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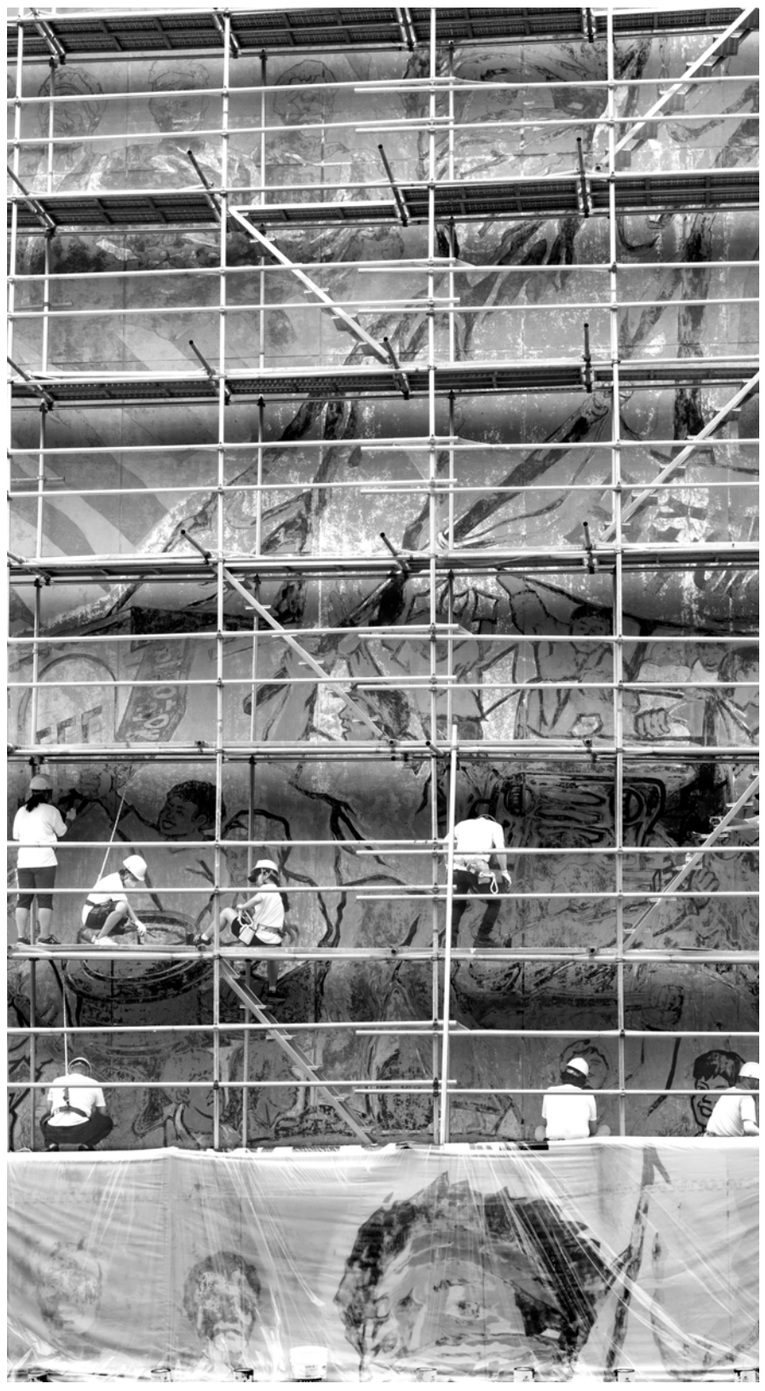
제빵업계도 살충제 계란 불똥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한 대형 제빵 프랜차이즈의 경우 지난 17~18일 매출이 전주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빵을 만들 때도 살충제 계란이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계란 소비가 격감하면서 AI 여파로 고공행을 이어가던 계란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18일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샘플조사 결과 특란 중품 한 판(30개)의 소매 평균가격은 7358원으로, 14일 7595원에서 237원 내려갔다. 계란 한판당 최고 가격도 14일 8700원에서 18일 8150원으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4일 만에 550원 떨어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의 충격으로 당분간 계란 소비가 위축되고 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계란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된 뒤에야 안정세로 돌아설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연합뉴스

전남대 벽화 ‘광주민중항쟁도’ 복원 작업 시작



전남대 민주동우회원들이 19일 전남대학교에서 ‘안전기원제’를 지낸 후 사범대 1호관 외벽에 그려진 ‘광주민중항쟁도’ 복원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제작된 이 작품은 광주항쟁을 다룬 최초의 벽화로, 복원을 거쳐 오는 9월2일 공개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70대 할머니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목포경찰은 20일 성폭행하려다 7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염전일 등을 해온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신안군의 한 마을에서 A(여·77)씨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A씨의 얼굴을 수건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뒤 탐문수사를 벌여 A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19일 긴급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숨진 A씨는 2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모두 외지에서 생활을 해 홀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법원, 전두환 회고록 인세 국고 환수 결정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으로 얻는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지난 10일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며 제출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껏 환수한 추징금은 총 1151억5000만원으로 전체 추징금 부과액(2205억원)의 52.22%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지난 4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회고록은 유통이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피자헛이 가맹점에 받은 ‘어드민피’ 문제있다” 법원, 공정위 과징금 정당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으로부터 받아온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영업·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대가로 받는 가맹비)에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피자헛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과 관련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를 받았다.

도입 당시 가맹점 월 매출액의 0.34%였던 어드민피는 한 차례 수정을 거쳐 2004년 말 0.55%로 올랐고, 2012년 5월부터 0.8%로 인상됐다.

/연합뉴스

DJ 8주기 현수막 훼손 광주서부경찰 수사 나서

광주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기리는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께 서구 운천호수공원 분수대 앞 도로에 설치된 김 전 대통령 추모 현수막이 찢긴 채 발견됐다. 현수막은 날카로운 도구에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현수막 훼손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文대통령 우표첩 못구하자 행패

쌍나팔

○…광주광산우체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우표첩(2만3000원)을 구하지 못한 40대 남성이 행패를 부리는 등 한바탕 소동.

○…20일 광주광산경찰 등에 따르면 윤모(44)씨는 지난 17일 낮 12시15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광산우체국에서 창구 직원 김모(여·44)씨에게 문 대통령 우표 구입을 문의했다가, “매진됐다”는 김씨의 말에 격분해 지폐계수기 등을 집어던졌다는 것.

○…문 대통령 우표첩은 현재 인터넷에서 10만원 이상 웃돈을 줘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인데, 광산우체국 관계자는 “애초 문 대통령의 우표첩 100부가 배정됐다”면서 “시민들이 새벽 4시부터 우체국 앞에 줄을 서는 바람에 오전 9시부터 판매한 우표첩이 1시간 만에 완판됐다”고 설명.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6타경 50344	1	진도군 진도읍 성동길8-17, 2층 206호 54.6㎡[이경열2/11지분전부.지분매각]	다세대	9,300,000 9,300,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3362	1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1 579㎡	전	9,843,000 9,84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78-3 202㎡[원상회복명령가능성있음.매각대상아닌주거용컨테이너1동존재]	전	7,878,000 7,87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92-1 506㎡[일부도로]	대	30,206,000 30,206,000	일괄매각.목록3매각대상아닌건물존재.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동소 산71-5 198㎡[일부인접필지건물이걸쳐소재.일부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	임야		
2016타경 3492	1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853 2083㎡	학교용지	22,308,700 22,308,7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매각외타인소유수목및건물존재.매각외건물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동소 866 169㎡	대		
		동소 867 165㎡	대		
		동소 845 26㎡	대		
		동소 869 79㎡	대		
	2	동소 1071 2202㎡[수종미상수목매각제외[소유권미상]]	전	10,349,400 10,349,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6타경 4938	1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42-1 2311㎡[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70,468,400 70,468,400	일괄매각.공부상 각각2동건물로등재,현황1동의건물.제시외건물포함
		동소 542-1 축사300㎡ 퇴비사108㎡ 제시외축사 등 39.2㎡	축사		
2016타경 50825	1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산168-1 13254㎡[타지상주택및창고[타인소유공가]일부위지상소재추정.현황일부전]	임야	37,012,480 37,012,48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박선의1/3지분전부
		동소 산168-9 2314㎡[매각대상아닌분묘수기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부불명.현황일부묘지]	임야		
[기타]					
2015타경 50255 2015타경 50422 [병합]	1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983-1 2081.8㎡	공장용지	1,709,350,600 1,709,350,600	일괄매각.제시외기계기구목록포함[일부소재불명]
		동소 983-1 식품가공공장,기속사1층2114.8㎡ 2층120.2㎡ 제시외 기계기구 죽 제조라인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목록참조	식품가공공장		
		동소 989-1 991.3㎡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목록참조	공장용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9. 4.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9. 11.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8.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